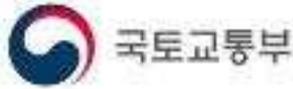


| | | | |
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| | 보도해명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19. 6. 6.(목) / 총 1매(본문1) |
| 담당 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박정규, 주무관 이종언 ·☎ (044) 201-3538, 3542 |
| 보도일시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

여러 소통채널을 만들어 크레인 안전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.

-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을 다룰 대화기구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정부는 소통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

- ① 민관협의체 : 한노(타워분과, 연합노련), 민노, 설해체, 임대사, 검사기관, 수입사, 제작사, 표준협회, 건설협회 등(1차 회의: 3.28, 2차 회의: 4.25)
 * 소형 크레인 교육기관 면허제도 개선 의견수렴 회의(5.21)
- ③ 개별 협의 : 한노(타워분과, 4.19, 5.20), 임대업체(4.16), 민노(4.22, 24), 제작사/수입사/표준협회 등(5.13)
- ④ 현장 방문 : 과천 타워크레인 설치 건설공사현장(5.10)

○ 앞으로 정부가 합의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고,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6월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6.6.목) >

- ◆ 타워크레인 파업의 시작과 끝에 도사린 국토부의 안이함
 - 국토부가 지난 3월 노사정 대화 기구 설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